

배포 일시	2022. 8. 26.(금)		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 오성운 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 황재갑 (044-201-4784)
보도일시	2022년 8월 27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6.(금) 17:00 이후 보도 가능		

민·관·학·연 손잡고 헬기안전 강화 ‘헬기안전 대책 T/F’ 26일 구성 운영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헬기 분야의 안전현황을 진단하고 헬기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·관·학·연이 참여하는 “헬기 안전 대책 T/F” 를 구성하고 8월 26일 1차 운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민간헬기 사고는 총 12건이었고 이 중 8건이 사망사고(총 10명 사망)였다. 사망사고는 주로 산불진화나 화물인양 작업 중 발생하고 있다.
 - * 민간헬기 사고현황 : ‘13년 3건 → ‘16년 3건 → ‘17년 3건 → ‘20년 1건 → ‘21년 1건 → ‘22.1~7월 1건
 - ** 민간헬기 등록대수 : 총 102대(‘22.7.31 기준)
- 이번에 발족한 T/F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헬기 사용 사업체, 지방항공청, 산림청, 소방청, 대학교, 한국교통연구원, 항공안전기술원,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.

헬기안전 대책 T/F

정부기관	업계	학계	연구·산하기관	민간
- 국토교통부 - 산림청 - 소방청	- 헬기 사업체	- 한서대학교 헬기조종학과	- 한국교통연구원 - 항공안전기술원	- 법무법인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T/F를 통해 헬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,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정비, 관행 개선, 업계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.
 -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주로 산불진화와 화물인양 중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, 조종사 훈련요건과 자격제도를 이런 특수임무 대처능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,
 - 매출 구조가 지자체와의 입찰 계약에 주로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해 입찰제도 상의 안전성 평가항목을 강화하는 한편, 무사고 업체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.
 - 또한 민간헬기와 국가기관헬기 간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활용 방안을 포함해서, 헬기와 관련된 국가기관 간* 범 정부 통합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.
- * 국토부(민간헬기 안전관리), 산림·소방청(국가기관 헬기 안전관리), 조달청(국가계약), 지자체(임차헬기 이용자) 등
-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“그간 여러 차례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안전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” 이라면서, “이번 T/F를 통해서 안전이 담보된 헬기 산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